

광주, 거주 중 아파트 철근 빠진 '무량판 구조' 없다

2017년~현재까지 전수 조사 '무량판' 공법 단 1곳도 없어 안심
철거 중 화정 아이파크만 채택 ... 市 "시민 안전 확보 추가 조사"

전국적으로 아파트 뼈대인 철근을 누락한 이른바 '순살 아파트' 공포가 확산하면서,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은 광주시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다행히 전수조사에서 광주시민이 거주 중인 아파트 가운데 철근 누락의 주범으로 꼽힌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아파트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광주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수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추가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는 모두 293개다. 이 중 105개 단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188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쳤다. 국토부는 이날 중 293개 아파트 단지 점검 일정과 방법에 대해 밝힌 뒤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관리 하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중 일부가 2017년부터 지하 주차장에 기둥이 직접 슬래브(콘크리트 천정)를 지탱하는 무량판구조를 사용하다 일부 주차장이 붕괴 됐으며, 그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도 이번 LH발 철근 누락 사고를 계기로 2017년 이후 준공 아파트에 대한 무량판 채택 여부를 전수조사했으며, 일단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한 상태다. 지난해 1월 공사 중 붕괴해 7명이 죽거나 다친 '화정동 아이파크'가 유일하게 무량판 구조인 것으로 확인되긴 했지만, 현재 철거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광주시 전수조사 결과, LH가 무량판 구조 채택을 본격화한 2017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광주에

? 무량판 구조

보 없이 기둥 위에 지붕을 바로 얹는 방식이다. 기둥과 맞닿는 부위에 압력이 몰리면서 구멍이 뚫릴 수 있기 때문에 완충 역할을 하는 '전단층'을 넣고, 이를 보강하기 위한 철근(전단 보강근)을 시공한다. 건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둥에 시공하는 철근이 부족해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서 준공 허가를 받은 민간 아파트는 140개소 5만 9799세대에 이른다. 같은 기간 이연에 문제가 된 LH발주 아파트도 10개소 3464세대가 준공됐다.

광주지역 전체 아파트가 1216개소 45만 2912세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시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중 14%가 해당 기간에 지어진 셈이다. 이 기간 준공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도 20만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광주시는 일단 무량판 구조가 본격 채택된 2017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준공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아파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2013~2016년 준공 아파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특히 같은 기간 국토부가 관리하는 LH발주 준공 아파트 10개소도 다행히 모두 무량판 구조가 아닌 기존 보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확인돼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국토부는 LH발주 아파트 전수조사를 통해 현재 시공 중인 선운 2지구 아파트 주차장 시설 중 철근 일부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오는 20일 까지 2억 5000만원을 투입해 안전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보완 작업을 지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파트 부실시공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1차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이중, 삼중의 안전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며 "문제가 된 LH발주 아파트의 경우도 국토부 관리 하에 있긴 하지만, 광주시민이 거주하는 만큼 안전 시공 여부 등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금값 채소를 위한 '쿨링포그' 연일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35도를 웃도는 고온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1일 오전 광주 서구 풍암동 서부농수산물 시장 내 채소상에 고온으로 채소가 상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쿨링포그가 작동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폭염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상향

"낮 시간 외부활동 최대한 자제"

행정안전부는 심각해지는 폭염 상황에 대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1일 오후 6시부터 가동했다.

폭염 위기경보 수준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 1일자로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기온이 급등함에 따라 향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확산할 것으로 예상, 중대본을 가동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폭염 피해 예방에 나선다.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 사회 취약계층, 공사장 야외근로자, 고령 농업인 등 폭염 3대 취약분야 관리대책 ▲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대책 ▲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관리대책 등 소관 분야별 폭염대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고령층 농업작업자를 중심으로 인명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관심을 갖고 예방활동을 하고, 지자체별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을 동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지자체를

폭염 주의하세요



광주·전남 36°C

포함한 각 기관은 지금까지 해오던 폭염 대응의 수준을 넘어 취약계층, 취약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라"라고 지시했다. 이 "국민께서도 햇볕이 뜨거워 낮 시간대에는 외부활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라고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기준 바꾼다

대통령실은 오는 21일까지 배기량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재산 기준의 개선 방안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세와 관련,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불합리하다는 국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던데 따른 것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배기량 중심의 자

동차 재산 기준은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 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 활용 중인 만큼 활발한 토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 재산 가치 산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다. 자동차세(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차량 용도에 따라 부과 기준

(영입액 cc당 18~24원, 비영입액 80~200원)을 달리해 적용한다. 차량이 출고된 해를 기준으로 사용한 햇수를 뜻하는 '차량'이 많을수록 감액한다. 반면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와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하여 정액 10만원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자동차세 취지를 고려하면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 가액, 운행 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참여토론은 21일까지 3주간 이뤄진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인도에 불법주차 ... 1분만 해도 과태료 ▶7면



8월엔 추억 쏟아지는 '촌캉스' 떠나요 ▶11면

KIA 포수 한준수 "매일 새 출발하는 마음"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전라남도청 동부청사 개청

2023년 7월

조직 일자리투자유치국
문화융성국
환경산림국
여순사건지원단
민원행정담당관

인원 320여명

위치 _ 순천 신대지구

세계를 향해
첨단산업과 문화융성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전라남도